

민주당, 한나라 증부세 과세기준 완화 총공세

“강부자” 혜택... 서민엔 ‘물가폭탄’

대여 공세 고삐... 법 개정 가시밭길

민주당은 24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민 강부의 부자,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는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한 증부세 과세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서민에게는 물가폭탄세례를 퍼부으려고 한다”며 “주택소유자의 2%밖에 안 되는 부자 세금 깎아 서민에게 부담 지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에서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 조위원장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나라가 써야 할 돈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자 세금을 내리면 중산층, 서민의 세금은 늘어나게 돼 있다”고 거들었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전남 강진군 수확재 정부 장관이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삼겹살 가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민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값, 삼겹살값도 모르면서 물가관리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오제세 제3정 조위원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마당에 2% ‘강부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가슴만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같은 당의 신하용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정책통들이 증부세 대책 등 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의장,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오제세, 송민순, 이용섭, 최영희, 김동철(특위간사) 등 각 정 조위원장을.

세 완화가 이뤄지면 고위공직자 71%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책은 쇠고기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린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그들이 따로 있으니, 바로 현 정부 실세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4월24일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서 현 정권 들어 임용되었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05

명(대통령 본인 제외) 가운데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 중 71.4%로, 해당 지역 재산 합계는 1천31억7천900만원 1인당 평균 13.7억원의 부동산을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증부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을 정부가 최근 밝힌 가스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방침과 연계시켜 ‘서민 고통 부담 가중’대 ‘부자 부담 완화’를 포인트로 대어(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쥘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동산 세제 대폭 손질... 어떤 내용 담길까

증부세 부과 기준 6억→9억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면서 증세 대상과 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이 내부 방침으로 정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그 일계를 그려본다.

◇개인별 합산 방식 과세=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지난 22일 증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울에서만 15만가구의 아파트가 증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서울에서 증부세를 내는 가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증부세 과세방법은 가구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증부세는 원래 개인별 합산 방식을 했지만,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가구별 합산으로 바꿨다.

그간 국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1가구 1주택을 증부세 대

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에 대한 증부세 완화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60세 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종합소득이 3천600만원이 안 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이하 일 경우 증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양도세, 일정기간 보유하면 원전 면제=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10년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가격이 15억원 밑이라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0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최고 80%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50%를 부과하던 양도세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참여정부 이전 양도세율이 9~36%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도세를 60%를 내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표 올리지 않는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실무당국회의를 열어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인상을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 기준을 인하하는 등 재산세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현행 공시가격의 50%로 동결된다. 이전 법대로라면 지금까지 50%였던 과표는 올해부터 매년 5%씩 올라 2017년에는 100%로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재산세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을 받아 왔다.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선 규정을 2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위원장은 “9월부터 재산세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번 경감방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대북특사 논란 ‘先 진상규명 後 파견’ 가닥

청와대는 24일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여론에 눈의와 관련,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적절한 기회가 되면 다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는 새 정부의 구상에 있는 것으로, 구상의 유효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남북간) 대화의 환경이 조

성되는 시기가 되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18대 국회 개인축하 연설을 통해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했다”면서 “이제 공은 북한에 가 있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사건의 적절한 처리 등을 전제로

한 대북접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다만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특사 제안을 해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대북특사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북특사 파견에 대한 논의도 무모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단계에서 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국가기록원, ‘기록유출’ 盧비서진 고발

국가기록원은 24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록물 유출에 관련한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해 봉하마을 측과 유출된 대통령기

록물의 원상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일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해 기록물에 연계함으로써 원상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록원은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완전한 회수가 돼야 하나 봉하마을 측이 e-지원시스

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기록물 사용내역은 페 의도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제 2, 3차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들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남뉴스

Advertisement for 'Nae Young Education' (국내영교육학) featuring 'Basic Problem Solving Class'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대특강) for 2009 school year. Contact: 529-0090.

Advertisement for 'Jeon Kongguk' (전공국어) classes, including TOEIC and TOEIC Speaking preparation. Contact: 222-6253.

Advertisement for 'Immersion Young Education' (임마션 유아교육과정) for young children. Contact: 02816-1646.

Advertisement for 'Je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or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exam preparation. Contact: 236-2468.

Advertisement for 'Dong-A Foreign Language Academy' (동아외국어학원) for TOEIC and TOEIC preparation. Contact: 222-6253.

Advertisement for 'Gongin Jeunggaesa'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for real estate exam preparation. Contact: 361-8111.

Advertisement for 'Mudung Gosihakwon' (무등고시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Contact: 222-4560.